

여야 지도부, 경남 수해 현장 총출동… “주민 일상회복 지원”

김민석 “트라우마 없도록 도울것”
장동혁 “안전관리 만전 기해달라”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 한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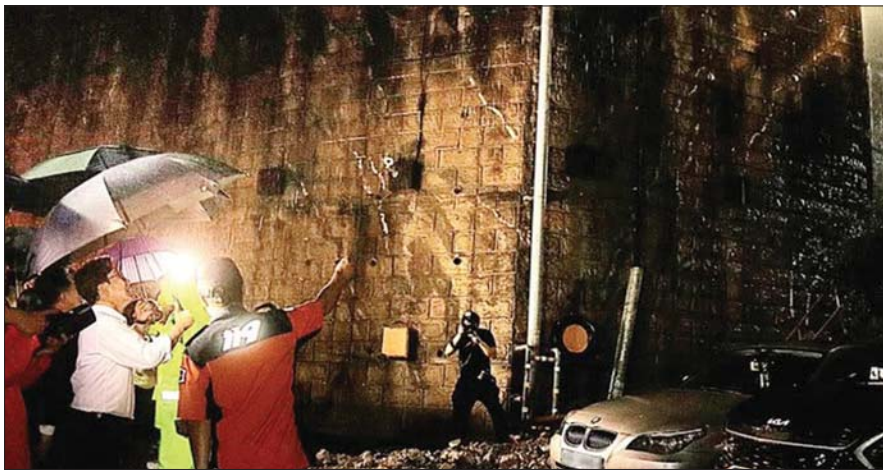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경남) 지역에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여야 모두 수해 지역을 방문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된 당일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를 방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피해 현장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산사태 발생 경위와 피해 현황,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남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상상 못한 전경이 거제 아파트 수몰 현장에 펼쳐져 있었다”며 “30여 년 동안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지역에서 생긴 산사태로 인해 토사가 쌓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7일 경남 거제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페이스북

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국민, 주민에게 보상하고 특히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없도록 (어떻게) 섬세하게 도와드릴 것인지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행정 지원이 제때 투입되도록 돕겠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경남으로 발길을 돌렸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날 첫 비행기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경남 거제·통영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등에 참석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었다.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산사태 피해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오전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인 옥포초등학교에서 피해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장 대표는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제, 통영, 사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국민의힘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부산·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며 “갑

작스러운 폭우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해 임시주거시설 또는 친척·지인 등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산과 경남은 최근 극한의 폭염과 가뭄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까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 주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김민석 신임 與 대표, ‘민생·당정 소통’ 강조

민주당 대표 취임 이틀째 현충원 참배
청와대와 소통하며 민생 중심 당 운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18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민생 현안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국립현충원과 효창공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등 취임 2일차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김 대표는 “어제 제가 당대표로 되고 나서 첫 감사 인사에서 앞으로 당이 ABC 플랜(민생 우선·확장 정책·유능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님이 강조하는 안전(Security)가 중요해서 ABC하고 S를 합치고 순서를 바꾸면 택시(CABS)가 돼서 민주당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새벽부터 달리는 민생 택시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당은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님의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뉴스1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면서 당은 민생의 촉수를 펼치고 새벽부터 전국을 돌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심을 청와대나 정부에 전달도 하고 토론회 하면서 당정 또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민생과 경제를 더욱 세

심하게 살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까지 당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당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심을 듣는 곳이다. 정부가 미처 듣지 못한 목소리 또 놓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접견을 마친 김 대표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운·한민수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헌종탑에 참배했다. 김 대표는 헌종탑 방명록에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 기관차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李, 왕이 中 외교부장 만나 한중관계 논의

5년 만에 방한… 내일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왕 부장은 오는 19~2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따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 및 역대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겸한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오는 19~20일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조현 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양 장관은 1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공식 만찬을 통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을 수행해 방한했으며,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또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11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총량 규제 제외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및 제36차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5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소 분리 후속 조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령 3건도 함께 의결됐다.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중수청장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일정 범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받을 수 있는 ‘수사심’의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을 규정했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안’은 수사관 채용과 승진, 징계 절차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들 법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

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주4·3사건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6월 30일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유족의 신고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정정 및 보상 신청기간을 연장했고,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입양신고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급 기준과 지급 사유·예외 사유도 함께 정비했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압포 근절을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복권기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지자체와 8개 기금에 무조건 35%씩 나눠 주던 방식을 없애고, 2031년부터는 지자체 몫을 12.086%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기금은 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도록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과도기를 뒤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성과에 따라 배분율을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